

막걸리 '국민酒' 분위기 탔는데… 쌀값 인상에 가격 오를까

최근 MZ세대 중심 막걸리 인기

연간 시장규모 8000억~1조 추산
1년새 국내산 쌀값 14.4% 급상승

쌀값, 술값좌우 결정적 요인 아냐
“장기적으로 반영될 여지는 있어”

국내 막걸리 시장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가운데 최근 쌀값이 급등하면서 막걸리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중장년층의 저가주류로 평가받던 막걸리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폭발적인 매출 증가를 보인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힙술, 훈술 등 가볍게 즐기는 음주문화에 따라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막걸리가 수혜를 받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복순도가 '손막걸리'(왼쪽), 해창주조장 '풀스로이스 막걸리'
2016년 3000억원대였던 국내 막걸리 소매시장 규모는 ▲2017년 3500억원대 ▲2018년 4000억원대 ▲2019년 4500억원대 규모로 성장했고, 지난해 5000억원

대로 성장세를 보인다. 이는 상품 출고 가를 기준한 수치이므로, 실제 유통채널 소비자 판매를 고려하면 막걸리 1개 품목만으로 연간 8000억~1조원에 달하는 시장이 형성된다.

막걸리 전성기의 근본적인 요인으로 유통혁신이 있다. 과거 막걸리는 유통기간이 짧은 데다 서울 장수마걸리, 인천 소성주, 포천 이동마걸리 등 지역을 기반으로 판매돼 전국 단위로 대중화가 어려웠다.

유통망 확산 및 기술개발로 전국단위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전국 판매권 확보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전통주 온라인 판매 등으로 판매채널을 다양화한 것도 소비 촉진에 일조했다.

그러나 최근 급등한 쌀가격이 오랜만에 불어오는 막걸리 시장의 훈풍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원가 상승이 가격 인상을 야기해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

막걸리에 사용되는 쌀은 주로 햅쌀보다는 정부 관리양곡을 사용한다. 정부 관리양곡은 정부가 국내에서 사들이고 외국에서 수입한 쌀이다. 쌀값 안정과 식량 안보를 위한 목적이이다.

1년 사이 최근 국내산 쌀 가격이 14.4% 상승했다. 지난해 장마 등 수해 영향으로 공급이 예전만 못한 탓이었다. 시중 쌀 가격이 상승하면 햅후 막걸리의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당장에는 영향이 없다. 국가에서 보유했다가 출고하는 쌀값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

하지만 이런 흐름에서 정부 관리양곡도 가격 상승을 피하지 못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9년도 수확한 쌀의 40kg(마대) 공급가격은 2020년 9만 9240원에서 2021년 10만 2250원으로 3% 올랐다. 쌀 관리비와 포장비용 등 부대비용이 상승한 탓이다.

유통비와 포장비, 판매비 등 부대비

용 큰 주류의 경우, 쌀이 원재료지만 술값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료 가격 부담은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일부 기업에서는 가격상승의 영향으로 원가에 영향을 주는 만큼 가격변동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막걸리 업계 관계자는 “원가에 영향을 주는 쌀값보다는 사실상 1위업체가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것이다. 아무래도 1위 기업 가격정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1위 기업이 현 가격을 유지하는 한 쌀값 변동과 상관없이 막걸리 업계는 큰 움직임이 없을 것.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쌀값 시세가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막걸리 업계 1위인 서울장수 측은 “막걸리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metroseoul.co.kr



입춘, 봄으로 가는 문

서예가 손환일씨와 모델들이 입춘인 3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입춘대길(入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이 쓰여진 입춘첩을 오른쪽 대문에 붙이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1분기 30.5조 조기집행… 40만명 고용유지

고용부, 직접일자리 83만개 확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해 30조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올해 1분기에 조기 집행해 40만명 이상의 고용유지와 직접 일자리 83만개 확보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3일 ‘2021년 정부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추진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1분기 내에 40만명 이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체한·금지업종에 대해서 휴업수당의 90%(일반업종은 67%)까지 지원수준을 상향한다. 104만 2000명 규모의 직접일자리 사업은 1분기 중 80%(83만명) 이상 조기 채용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확대, 상생형 일자리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투자가 지역주도의 일자리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충격이 큰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청년의 비경제활동

유입 최소화를 위해 일 경험과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1분기 중 추가적인 청년 고용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또 올해 첫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저소득층, 청년 등 59만명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일하는 모든 국민을 실업급여로 보호하도록 특고·플랫폼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의 단계적 적용 확대도 지속 추진한다.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되고, 같은 시기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 제한과 보험료 한시적 경감 등 가입 확대 노력도 병행 키로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만 7000명을 양성하고, 4만명 대상 디지털 기초훈련비용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등 노동시장 혁신에도 나선다.

범부처 협업 예산 체계를 통해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 청년 등에게 신기술과 그린산업 등 유망산업 진출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소비·고용 부진 여전한데 경제는 성장?

‘반도체 수출’ 착시… 성장 양극화 우려

한은 ‘제1차 금통위 정기 의사록’
“반도체와 여타업종 생산 극명화
半 제외 제조업 가동률 산출해봐야”

우리 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지만 소위 반도체 착시현상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고용악화와 소비부진 등 체감경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반면 반도체 수출이 성장세를 이끌어가면서다.

3일 한국은행의 ‘2021년도 제1차 금통위 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 위원은 “우리 경제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재차 확대되면서 소위 반도체 착시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가 여전히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는 호조를 보이면서 지난 2018년과 같이 관련 수출 및 설비투자가 성장을 견인하고 이에 따라

경기흐름이 일견 반등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작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 (속보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당초 예상보다는 선방한 수치다. 하반기 들어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다른 금통위원 역시 “최근 몇년 간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을 보면 반도체 업종과 여타 업종이 극명하게 다른 양상을 보여왔다”며 “반도체를 제외한 경제의 흐름을 짚어볼 필요가 있으며, 반도체 업종을 제외한 제조업 평균가동률을 산출해볼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제시했다.

올해 경기회복세 역시 수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금통위원은 “민간소비의 회복은 더딜 전망이나 수출과 투자가 반도

체 경기회복 등에 힘입어 기존 전망수준을 상회할 것”이라며 “올해 3% 내외의 성장을 달성한다면 기저효과를 감안할 때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수준으로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코로나19 전개상황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성장의 내용을 보더라도 실물과 자산시장의 괴리, 부문간 불균형, 부채누증 등으로 인해 경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취업자수가 크게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은 부진이 심화됐으며, 올해 전망도 밝지는 않다.

한은 관련 부서는 “주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고 일자리 사업이 재개될 경우 고용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전반적인 고용 상황은 자영업과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예년에 비해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안철수, 4·7재보선 ‘제3지대’ 단일화 나서

금태섭, 단일화 제안 ‘수락’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제3지대 단일화’에 나서기로 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앞서 범야권 후보들의 출마선언이 이어진 가운데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제3지대 단일화 대상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으로 꼽힌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안 대표의 단일화 제안을 수락했다.

안철수 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범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한 것은, 선거에서 야권이 승리하지 못하면 정권교

체를 이룰 수 없다는 절박한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모든 범야권의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를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야권 후보 단일화 예비경선이 A조라면, 국민의 힘은 예비경선 B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후보 단일화 조건으로 ▲‘문재인 정권 심판 및 정권교체’ 교두보 놓겠다는 단일화 취지 동의 ▲헌법 정신과 법치, 국민 상식에 대한 존중 및 무너져 가는 정의·공정 바로 잡기 ▲일체의 네거티브·인신·비방성·발언 없이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 ▲단일화 후보 공개 지

지 선언▲1차 단일화 이후 국민의힘 후보와 경선 통한 야권 후보 단일화 완성을 등을 내걸었다.

안 대표는 단일화 조건을 내건 이유에 대해 “단일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단일화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 범야권의 저변을 넓히고 서로의 합이 더 커지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 전 의원 등 범야권 후보들에게 참여도 호소했다.

안 대표 제안에 금 전 의원은 이날 NS를 통해 “집권 세력의 독주를 견제하고 권력형 성폭력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에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야권 후보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 말씀하신 조건들은 흔쾌히 받아들이겠다”고 화답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